

Left21.com

제66호 | 2011년 10월 8일 ~ 10월 21일 | 값 1,800원

레프트21

파산하는 좀비 자본주의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커지고 있다



월가 '점령' 시위대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를 풍자하는 좀비 분장을 하고 행진하고 있다.

월가 '점령자'들 "부자에게 과세하라"

세계 자본주의가 더블딕으로 빠져들고 지배자들이 긴축정책으로 고통을 전가하려 하면서, 전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커져가고 있다. 1968년 같은 전 세계적인 반란 물결의 초입부가 아닌지 하는 기대도 제기된다.

특히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미국 월가의 '점령' 운동이 전 세계 보통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월가 점령' 운동은 9월 17일 수백 명으로 시작됐다. 그 뒤로 이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미국 주류 언론에도 보도됐다.

9월 24일 뉴욕 경찰이 잔인하게 진압을 시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이 맨하탄에서 진행중인 놀라운 모습에 쏠리게 됐다. 이제 비슷한 투쟁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욕 학생인 매리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노동 연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월가 점령과 조직 노동자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일(10월 5일)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노동 조직과 지역사회 모임 등과 조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가 점령 운동이 강력해지려면 노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노동운동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보였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월가 점령 운동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운동이란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월가 점거 참가자들은 많은 행진과 집회 프로그램을 조직해 자신의 행동을 대중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클린턴은 뉴욕 경찰이 이런 시위에 강력히 대처했지만, 그것은 참가자들의 투지를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 경찰은 폭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최루가스를 뿌렸습니다."

▶ 3면으로 이어짐



시위에 나온 참전 군인
"나는 두 번이나 내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내 적을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누구의말을알까?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주식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 우리 일은 이러한 상황에서 돈벌이하는 것 …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를 지배한다.”

런던 금융시장 트레이더
알레시오 라스타니

이명박: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네티즌: “치매 걸렸나 아니면 일부러 웃기려고?”, “드디어 주화입마에 들어가셨구나.”
‘도덕적으로 완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바위에 떨어져 죽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징조가 좋지 않다.”
김문수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서 인수합병(M&A)할 찬스”
2008년에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던 강만수.

“앞으로 대통령은 형님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청와대를 BH라고 하는데, 옛날엔 ‘블루하우스’, 지금은 ‘비리하우스’”
민주당 이춘석

“영구 도와주려고 하다가 영구돼 버렸다.”
한나라당 이상권,
무역보험공사가 심형래를 지원했다가 손실통다며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 주면 돼요. …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 공약은 말로만 하면 돼요.”
공감 백 배 받고 있는 개그 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

“외국인 노동자 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출신 상대로 에이즈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나라당 윤영,
무식한 의원의 인종 차별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10월 21일)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피아노거리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공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사공장 앞)

☞ <레프트21> 온라인

☞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자폭하기 시작한 ‘완벽하게 부도덕한 정권’

“우리는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 충격적일 정도로 부조리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은 애초부터 ‘완벽하게 부도덕’한 정치인이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전 주한미대사 버시바우의 지적처럼 이명박은 “80년대를 마음대로 누볐던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의 일부로서 “법을 다소 느슨하게 해석하는 삶을 살아” 왔다.

2007년 대선 때 그의 별명은 계속 비리를 쏟아내는 ‘비리 자판기’, 언제 어디서나 걸리는 ‘비리 애니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리의 시한폭탄’ 등이었다. 당시 도곡동 땅과 BBK 의혹 때문에 우파들은 이명박의 ‘유고’ 가능성을 걱정할 정도였다.

집권 이후에도 이명박의 ‘완벽한 부도덕’성은 계속됐다. 이명박 부인의 사촌언니가 연루된 ‘언니 게이트’, 이명박 사돈이 연루된 ‘효성 게이트’가 이어졌고, ‘왕의 친구’ 천신일과 ‘만사형통’ 이상득을 둘러싼 추문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정부에서는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가 4대 필수과목이고 이 가운데 한두 개 이수하면 장관, 전부 이수하면 대통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이러니 이명박의 이번 말을 듣고 기억상실이나 과대망상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이런 구호 아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없다. 더구나 이국철 게이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의 말은 더욱 기괴하게 들린다.

SLS 회장 이국철의 폭로에 따르면 신재민은 수년간 각종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십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먹었다. 그런데 이국철은 신재민이 삼친 돈이 “여권 실세에게 간 돈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권재진, 전 지경부 차관 박영준 등이 새로 등장하고 있다. 박태규 리스트에도 전 기재부 장관 윤증현, 언론특별보좌관 이동관 등이 등장한다. 이상득은 양 리스트 모두에 걸치기 출

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명박의 ‘측근 중 측근’들이고 이 정부의 ‘실세 중 실세’들이다.

이미 지난해 ‘영포 게이트’ 때 드러났듯이 이들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등을 손발처럼 휘두르고, 주요 공기업과 은행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국가 정책과 구조조정 계획 등을 주물러 왔다.

특히 이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기업 부자 살리기’를 위한 퍼주기로 국가 부채가 무려 1백50조 원이나 늘어나는 동안 이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이국철은 이들에게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과 기자회견

“6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라!”



탄압은 정당성 위기를 겪는 정부의 몸부림일 뿐.

한 것이다. 지금도 경제 위기에 부패 사건도 터지고 집권당은 분열하고 있다. 오죽하면 집권당 내에서 ‘썩은 나무토막처럼 쪼개지고 있다’ 하는 탄식이 나오겠는가.

“최근 논란이 된 영화 <도가니>가 보여 주듯이 사법부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에 애써 눈감은 채 검찰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정 투쟁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한 김형환 씨는 “검찰이야말로 경찰과 ‘공모’해 우리를 처벌하려 한다. 우리는 모두 무죄다” 하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는 검사가 새로운 증거 제출을 위한 시간 여유를 주문해 2차 재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6인도 더 큰 연대와 지지를 모아 맞서기로 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란다.

김지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선을 댔 후 무역보험공사에서 5천억 원 특별 지원을 받았다.

물론 이런 부패 고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 BBK 의혹을 덮은 MB맨들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었으니 말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비리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불을 끄는 소방수였다. 그러나 이명박의 조기 레임덕이 더 심각해지면서 상황은 변했다. 이명박의 통제를 벗어나는 권력기관, 각자 살 길을 찾는 한나라당 의원들, 폭로전에 나선 민주당이 상호작용하며 통제불능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신재민이 이국철 돈으로 2007년에 미국에 가서 한 일이 BBK 의혹 덮기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사건의 폭발력은 더 커졌다. BBK는 이명박 시한폭탄의 뇌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지원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정권이 흔들흔들할 수 있다”는 이국철의 말을 전하며 “이런 것들이 다 터지면 시쳇말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구속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누구나 알다시피 ‘형남’은 이상득이고, 이명박은 이상득의 ‘아우’인데 말이다.

과연 이번에도 이명박 정권은 비리 시한폭탄 심지에 붙은 불이 더 타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이나 할 정도의 비정상적 정신 상태로?

전지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2차 재판

일시: 10월 26일(수) 오후 5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형사항소과 제5형사부 양현주 판사

일 지
2010년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함
6월 26일 법원이 6인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함
2011년
7월 28일 6차 재판에서 5인 무죄, 1인 선고유예 선고
8월 4일 검찰 항소, ‘대책위’도 선고유예에 항소함

제주 해군기지

깡패처럼 건설되는 ‘해적기지’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고 무지막지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여론과 계속 드러나는 증거는 이 기지가 평화와 민주적 절차를 위협하는 괴물이라는 것이다.

세계적 진보 석학인 미국의 노암 촘스키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가 “한국과 중국 간 군사적 대치를 촉발해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게 될 것 … 초강대국들의 참혹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전 세계 사회정의를 신봉하는 이들이 … 강정마을을 중요한 전장으로 여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정부와 해군이 정당한 법적 절차까지도 위반하며 공사를 강행해 온 사실’이 밝혀졌고, 그들이 주장해 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실재론 해군기지를 건설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도 정부와 해군은 상식을 뛰어넘는 탄압을 자행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10월 2일에는 구럼비 바위로 기지 건설 반대 기도를 드리러 해엄쳐 가는 종교인 송강호 씨를 해경구조대원이 붙잡아 수십 10미터가 넘는 곳에서 오리발을 빼앗고 수차례 얼굴을 물속에 처박는 짓을 저질렀다.

같은 날, 공사 강행에 항의하던 대학생과 노동자 열다섯 명이 연행됐고, 10월 4일에는 해군이 쳐 놓은 펜스를 넘어 구럼비 바위 해안가로 간 천주교 신부들과 기자를 폭력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한 <미디어충청> 기자에게 취재 목적과 내용을 진술해야 풀어 줄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취재 내용 삭제까지 강요했다. 현재 구속자는 일곱 명이나 된다.

이런 폭력과 위협에도 저항을 이어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저항 운동가들은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 부르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해적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문성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10월 8일(토) 오후 3시 부산 도심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 정리하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전국민중대회

주최: 민중의 힘(중) 주관: 민주노총

10월 8일(토)~9일(일) 부산 5차 희망버스

10월 9일(일) 오후 4시 서울 덕수궁 앞

한미FTA저지 결의대회

주최: 한미FTA저지 범국민, 민중의 힘(중)

10월 22일(토) 오후 4시 서울시청광장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주최: 전국비정규직 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반란을 촉발하는 월스트리트 점령

▶ 1면에서 이어짐



사진 출처: Louis Cukarda

월가를 점령한 시위대 “일자리, 교육, 의료”에 돈을 써라.

“많은 미국인은 자기 나라에서 이런 잔인한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경찰이 닥치는 대로 연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에는 7백 명이 연행됐습니다. 우리는 이날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행자들을 위해 의료진을 모으고, 식량과 물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연대 정신을 더 강화했습니다.”

월가 점거는 맨하탄의 민간인 소유 공원인 주코터 공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점거 참가자들은 이집트 카이

로의 타흐리르 광장을 떠올리며(‘타흐리르’는 자유를 뜻한다) 이 공원의 옛 이름 — 자유 광장 — 을 사용한다.

자유

점령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월가 점령은 위계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모여 워킹 그룹을 꾸릴 수 있습니다.

“워킹 그룹은 총회에 보고합니다. 월가 점령의 운영 방식은 자발적이면서 조직돼 있습니다.”

점거 참가자들은 원래 인터넷과 대안 미디어를 활용해 주류 언론들의 무시를

극복했다. “모든 사람이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얘기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뉴욕 타임스>는 일면에 우리 기사를 실었고 그것은 우리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의 70개 넘는 도시들에서 비슷한 행동이 계획 중이거나 조직 중이다.

“그런 소식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얼마 전 ‘아랍의 봄’이 발생했죠. 이제 ‘미국의 가을’(Fall)이 벌어질 차례입니다. 미국 제국의 몰락(fall)을 가져올 가을 말이죠.”

“긴축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공화당이 요구한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린턴은 이것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월가 점령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회서비스와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99퍼센트에 속하고 현 정부를 좌우하는 금융과 부동산업이 1퍼센트가 되는지에 관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기지를 내지 못하고 집을 잃었지만 월가와 은행들은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정서가 광범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 의존하는 노동계급부터 자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중간계급

까지 우리가 모두 긴축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학생들은 큰 빚을 져야 합니다. 학생 빚 문제는 신용카드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흔히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자리는 눈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부자가 이 위기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대신에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유세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니다. 주식 양도세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의존하는 서비스인 학교와 소방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클린턴은 올해 초 벌어진 위스콘신 투쟁에서 큰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지키려고 파업을 벌이고 주의회 의사당 건물을 점거했다.

“이전에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스콘신 투쟁은 그런 자포자기 심정에 도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런 투쟁은 월가 점거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투쟁도 아닐 것입니다. 월가 점거는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습니다. 나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의 일부가 되는 것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아무도 혁명의 순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투쟁이 어디로 향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길을 발견할 생각합니다.”

비행사 노조 조합원 7백 명이 노동계약 조건 악화에 항의하며 월가로 행진했다. 대중교통 노조, 교사와 서비스 노조는 10월 5일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 월가에서 아난디야 바타차리야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 김용욱

유럽 반긴축 투쟁의 도미노

그리스

정부 청사를 점거한 노동자들

지난주 그리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 청사 건물을 막고 긴축 조사관들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국제 ‘구제금융 조사관들’은 그리스 정부 부서들의 회계 장부를 검토하려 9월 29일 입국했다. 그들은 장부를 검토한 후 7월 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추가 긴축을 요구하러 왔다.

재무부 공무원 노동자들은 “점거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도 살아야겠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걸었다.

다음 날 노동자들은 재무부 철제문을 닫고 그 위에 스프레이로 “저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하고 적었다. 조사관들은 아직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 7천여 명이 이 행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다섯 개 정부 부서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노동자들은 10월 4일 아침부터 여섯 개 부서 건물을 다시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수요일(10월 5일)에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합류하려고 건물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요일부터 점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는 이 행동이 기존 노동자들에 의

해 추동됐다고 말했다. “이 행동이 하루 행동으로 끝날지 아니면 무기한 지속될지는 각 부서 노동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10월 4일 1천 명이 개발부 앞 도로를 점거하고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역 관공서 건물들을 점거 중인 지방 정부 노동자들을 지원하러 몰려갔다.

10월 2일 내각 회의에서는 그리스가 다시 한 번 불황에 빠질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스 정부는 의회 승인을 얻으면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 3만 명을 추가로 해고할 계획이다.

10월 5일 전체 공공부문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10월 19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노조 관료들이 정한 틀 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전면 행동을 벌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건물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회의에서 점거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버스 노동자들은 총회를 열고 장기 파업을 벌일지 결정할 것이다. 최근 아테네 전철 운전 노동자들은 이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포르투갈

10만 명의 긴축 반대 행진

10월 1일 13만 명이 새로운 우익 정부의 긴축 계획에 항의하며 리스본 시내를 행진했다. 또 다른 주요 도시인 포르투에서도 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포르투갈의 최대 노조연맹이 이날 집회를 조직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포르투갈에 긴축 정책들을 강요했다.

현재 포르투갈 실업률은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12퍼센트에 달한다.

포르투갈 노조들은 11월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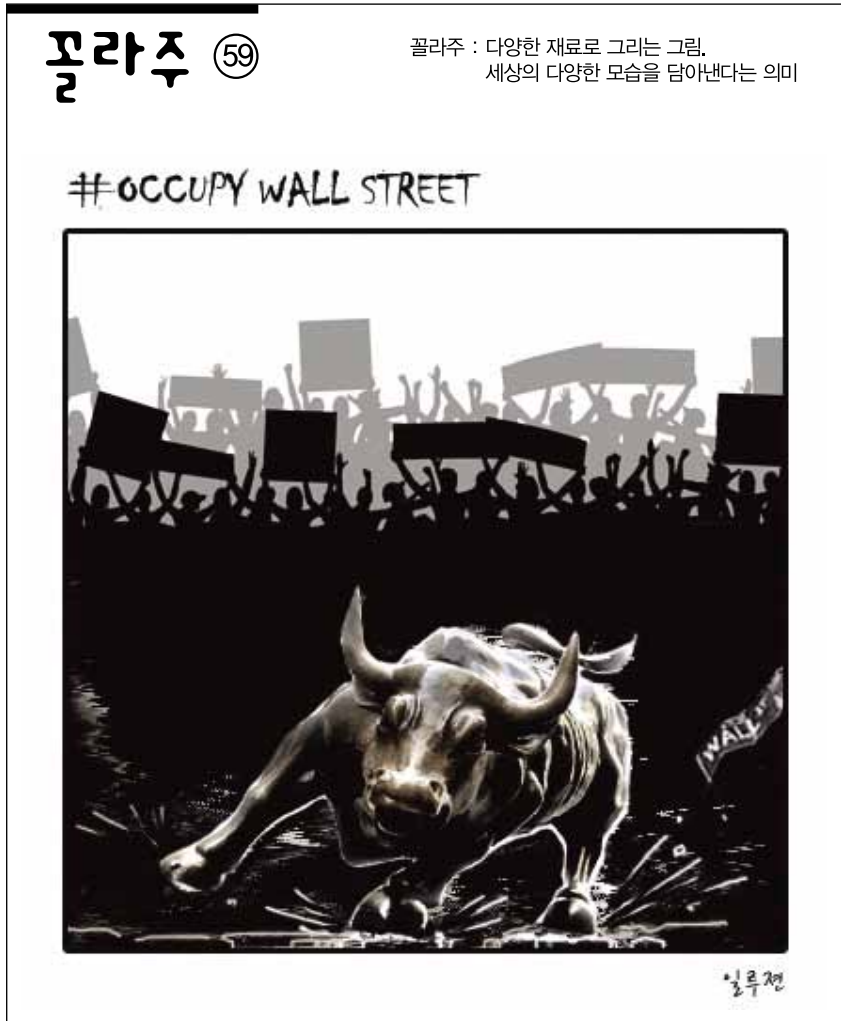
영국

긴축 반대 총파업을 준비하는 노동자들

10월 2일 3만 5천 명이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 대회와 긴축 정책에 반대해 행진을 벌였다.

‘일할 권리’ 단체와 영국노총(TUC)이 이날 시위를 조직했다.

노동자, 학생, 연금 생활자, 노동당



당원, 생전 처음 시위에 참가한 사람과 베테랑 활동가 등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2백여 노조와 단체가 이날 집회에 참가했다. 전날인 10월 1일 글래스고에서는 1만 5천 명이 긴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영국 보수당·자민당 연립 정부는 대서 정부를 능가하는 가혹한 긴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 말 긴축 반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파업은 1926년 이후 최대 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 김용욱

회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우 높아져, '제2의 리먼브러더스'가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높아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30퍼센트가 넘는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나 외환보유액의 40퍼센트에 이르는 단기외채 비중 등 때문에 미국·유럽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면 급격한 금융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나라 지배자들이 그토록 찬양하던 외자 유치와 금융자유화가 한국 경제를 초국적기업·자본의 '현금인출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환율 상승 때문에 물가가 4퍼센트 넘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삭감돼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금융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토빈세처럼 국제적 금융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독일 정부와 같은 지배자들의 일부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금융회사의 수익을 떨어뜨릴까 봐 도입을 꺼리고 있다.

높은 금융시장 개방 때문에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국에서는 토빈세 도입 등으로 투기자본을 반드시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빈세로도 부족하다면 전면적인 외환 통제로 환율을 조절하고 물가를 억제해, 대중의 삶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금리 인상

또, 한국 경제는 단지 미국·유럽의 재정·금융 위기 여파만이 아니라 9백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도 위험 요소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겨레21〉은 “금리 인상 없이 부채 문제를 잡는 어떤 방법도 거짓말”(전성인 교수)이라며 지금이라도 금리를 올려 부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집값을 떠받치려고 추진한 저금리 정책 때문에 물가·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가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늘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3사분기 들어 가계 부채를 억제하면서 대출금리가 오르자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오히려 3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거둔 점을 보더라도 금리 인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급등한 이유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임금 상승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려고 빚을 늘린 데다가, 2000년대 주택 가격이 치솟을 때 노동자들에게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결과였다. 대기업·은행·건설



은행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 부족해진 소득 때문에 늘어난 가계부채의 부담을 노동자·민중이 져서는 안 된다.

외자 유치와 금융자유화가 한국 경제를 초국적기업·자본의 '현금인출기'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들의 이익 때문에 생긴 가계부채 문제를 왜 노동자·민중이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진보진영은 금리 인상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은행들을 통제해 노동자·서민의 이자 부

담을 낮추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금융 위기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실물 경제도 침체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2008년 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중국·인도·브라질 등에서도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 온 한국의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성장을 전망치도 4퍼센트로 떨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 주류 언론들조차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지만 오히려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한국 지배자들이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에 격렬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 묶인 사회적 부를 국민 경제로 순환시키고 노동으로 재분배시키는 대개혁이 없이 단순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김병권 부원장의 지적은 타당하다.

부자 증세에 대해 미국 공화당이 “계급전쟁”이라며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배자들은 외환·금융 통제, 부자 증세, 복지 확대, 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익을 줄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계급전쟁’은 멈춘 적이 없다.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을 건설할 때에만 ‘계급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 위기 시기에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강동훈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지 예산 증가율은 3퍼센트대에 그쳐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내년 복지 예산은 사실상 축소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 5천 명 줄였고, 기초생계 급여도 8백41억 원이나 깎았다. 올해 무려 10만 명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해 안타깝게도 이를 비판한 노인들이 여럿 자살했는데, 이런 고통을 더 키우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이번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일자리 예산 증가액은 4대강 수질 개선 예산보다 작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노동자·민중을 더욱 쥐어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수 언론은 국가가 진 빚이 4백48조 원에 이른다고 긴축을 지지한다. 이런 때에 복지를 늘리다가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며 호들갑을 떠다. 〈조선일보〉는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가 진 빚은

1백50조 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복지를 늘려서가 아니다. 90조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를 하고 4대강 사업 등 기업주들의 주머니를 채워 주기 위한 삽질에 60조 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면 진정한 ‘베짱이’들인 재벌·기업주의 금고로 들어간 돈을 회수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균형재정” 운운하며 긴축을 강요하는 것은 부자들 때문에 생긴 위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짊어지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하려면 군살을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축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에서도 재정균형을 위해 긴축으로 이동하자 곧바로 금융 불안과 실물 경제 침체가 이어졌다. 그러므로 긴축을 강요받을수록 성장률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IMF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국가 채무의 1퍼센트 감소는 2년 안에 GDP의 0.5퍼센트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실업률 0.3퍼센트 상승을 부를 수 있다.

진정한 ‘베짱이’들

한국에서도 긴축 재정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해진 이유 중에는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 때문에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이런



식비를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문제가 은행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다. 정부가 긴축으로 전환할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뿜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증세를 하면 오히려 기업 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가 막대한 감세를 해 줬는데도 지난해 말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 평균 1천2백19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세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감세를 한다 해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부자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 둔 돈을 거둬 들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이윤율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 확대로는 경제 위기 탈출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5만 명이 8백억 원에 이르는 사재를 쓰고 있는 현실, 심각한 물가 인상, 전세난, 실질 임금 삭감, 실업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물론 무상급식 투표에서 봤듯 조그마한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보수 우익과 기업들은 증세 요구에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처럼 “달려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하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고장 난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는 민주적인 계획경제를 만들 동력도 성장시킬 수 있다.

정선영

10·26 재보선

진퇴양난에 빠져 헤매는 이명박 정권

최미진

전임 정부들보다 1년이나 먼저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계속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오세훈이 불을 댕긴 복지나 반복지나의 한판 승부에서 참패한 후 레임덕이 한층 더 앞당겨진 상황에서, 연달아 터지는 측근 비리가 그것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무게중심인 경제가 빨간불이다. 환율이 오락가락하고 주가가 널뛰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이 레임덕의 진정한 배경일 것이다.

이미 긴축으로 방향을 잡은 내년 예산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아무런 책임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영화 〈도가니〉에 대한 대중적 호응이 이렇게 큰 이유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이명박 정부 하의 부정의한 현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징조가 좋지 않다”

이 상황에서 우파들은 우파적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밀고 나가자니 선거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로서도 내년 총·대선의 시급성이라고 불리는 10·26 재보선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 뛰어 들었다가 패배하면 대세론이 무너지는 모순에 처해 있다. 그래서 “분명히 도올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더라도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선거운동에 스며들어 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반발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 친박 진영이 대선과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성향 유권자

의 표를 얻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보수의 이념에 충실한 전통 지지층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앞장서서 청구한 보수단체들은 이석연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석연의 더 선명한 보수 정체성 내세우기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지지를 3퍼센트를 헤매던 이석연은 “나는 보수가 아니고,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다며 황설수설하다가 나경원 지지 선언도 하지 않고 사퇴해 버렸다.

결국 이도 저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결국 총 맞아 죽었고, 그 부인 육영수 여사도 총 맞아 죽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징조가 좋지 않다”(경기지사 김문수)는 냉소적 한탄만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진정한 기반이 재벌과 기업, 우파에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 속에서도 친기업·반노동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다.

이번 재보선의 최대 쟁점인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한나라당은 결국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온갖 기회주의적 타협으로 대세론을 지키려는 박근혜의 정책 역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하자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벌써 ‘박[원순] 후보는 촛불 사태 때 가두를 선포했고 이념도 불분명한 불안정한 후보’, “검증 안 된 길거리 시민운동 세력”이라며 낡은 색깔론을 펼쳐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패배는 진보적 대중의 시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진보운동은 그 자신감을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고쳤던 조전혁과 밀담을 나누는 나경원 나경원은 언제나 한나라당 정통 우파의 대변인이었다.

나경원 — 화장한 이명박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은 그동안 젊고 똑똑한 여성 이미지로 표를 모아 왔지만, 껍데기를 벗겨 보면 낡은 보수 정책들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한나라당 우파 정치인일 뿐이다.

나경원은 3년 동안이나 한나라당 대변인을 하며 한나라당의 우파적인 정책들을 대변했다.

오세훈이 주도한 무상급식 투표 당시엔 “오세훈 시장이 계백 장군처럼 혼자 싸우다 죽게 해서 안 된다”며 앞장서서 옹호했다. 오세훈이 참패하자 뒤늦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뒀지만,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에는 반대

하고 있다.

나경원은 여성이지만,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은 눈곱만치도 없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장애인 알몸 목욕을 연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영화 〈도가니〉로 장애교육시설 문제가 불거졌지만, 나경원은 문제로 떠오른 사학재단 규제에 반대해 왔다. 나경원은 사학재단 집안의 딸로서 “5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맨 앞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선 경력이 있다.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과거도 들 통났다. “뺨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

명박과 막상막하인 것이다.

나경원은 “[이명박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지, ‘내가 설립했다’고 말한 바 없다”며 이명박의 추잡한 부패를 앞장서서 감싸는 구실도 했다.

결국 나경원이 아무리 쪽방촌 사람들과 악수하고 다녀도 재산이 40억 원이 넘는 판사 출신 엘리트라는 계급 기반에서 나오는 우파적 본색을 숨길 수는 없다.

김영삼을 찾아가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성 차별적인 덕담을 주고 받고, 김종필의 손등 키스까지 받아 가며 우파 원로의 환심을 사러 할수록 나경원에 대한 대중의 역겨움만 커질 것이다.

박원순의 부상과 민주당의 위기

반이명박 진보 대안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

김문성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뽑혔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제친 것은 “안철수 바람”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정서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미디어오늘〉)로 볼 수 있다.

그는 한나라당 나경원도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데, 이는 기성 정당들이 평범한 다수의 삶을 보호하거나 개선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의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원순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창립을 주도하고, 2000년 총선 낙선·낙선운동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반대, 재벌 개혁, 부패 추방 등 권력 감시 운동에 앞장서 온 진보적 NGO의 대표 인사다.

이처럼 기성 정치 바깥에서 진보·개혁적 사회운동 경력을 쌓아 온 박원순 후보의 부상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반감이 반한나라·비민주당의 온건 개혁주의로 향하는 최근 경향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위기감이 크다. 대선 전초전에 제야당이 후보를 못 내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출신인 손학규 말고는 딱히 대안도 없는

계 민주당의 처지다.

이런 민주당의 위기는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한미FTA, 한EUFTA 등 중요한 쟁점마다 결정적 순간에 한나라당과 타협하며 반MB 대중의 뒤통수를 쳐 왔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세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진보의 독자적 목소리보다는 민주당과의 협력

이나 참여당과의 통합을 더 중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선거연합으로 선거에서 실리를 얻기는 했지만 막상 정치적 존재감은 후퇴했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후보 양보 약속을 어긴 민주당에 맞서 강원도 공동지방정부 협의를 파기했지만, 진보의 원칙과 정책을 두고는 차별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 경선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기대보다 저조한 지지를 받은 것도 진

역겹기 짝이 없는 우파의 박원순 비방

한나라당은 아름다운재단이 재벌 기부 받은 것을 두고 “위선 진보”라고 비난한다. 청와대 대통령실장 임태희도 “순수한 나눔이 아니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선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러면 ‘차떼기’로 재벌들의 검은 돈을 받고 탈세 묵인, 노조 탄압 지원, 감세 혜택 등을 줬 온 것이 “순수한 나눔”인가.

늘 뒤가 구린 대가성 돈을 받아 왔던 자들 눈에 세상이 구려 보이는 건 똥개 눈에 뭇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래서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했을 때, 한 네 티즌은 “무조건 봐 주겠다는 뜻”이라고 비웃었다.

바로 직전까지 “따뜻한 자본주의”나 “자본주의 4.0”이니 하면서 ‘기부’를 강조하다가 이제 박원순을 비난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도 황당무계하기만 하다.

온정적 개혁주의

우파들의 정신분열적 비방과 달리 재벌·부자들의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박원순 후보의 온정적 개혁주의는 공감할 만하다.

박원순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복지 제공이 공공복지의 보완 구실을 하며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도 이윤 논리를 따르는 ‘기업’이므로 비용 절감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외부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 ‘아름다운 가게’도 박봉을 감수하는 직원과 무급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태다.

참여연대에서는 정부와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운동을 표방했던 박원순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활동 때부터는 정부와 대기업 후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과 민간의 기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부자 증세로 국가의 복지 재원을 늘려서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인 복지 대안일 것이다.

이것은 재벌과 그들을 비호하는 정부에 맞선 대중투쟁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박 후보는 “시위는 어차피 사그라지게 되어 있다”면서 대중의 주체적 행동보다는 공익적 엘리트들의 수동적 후원자로 대중의 구실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위로부터’ 관점에서 박 후보가 민주당 입당이나 공동정부 구성에 초점을 둔다면, 그의 좋은 취지와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참여당 통합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 중구 위원장, 다함께 운영위원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국 민참여당(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이 부결 됐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 주류 지도부 (이른바 ‘당권파’)의 구상에 적잖은 차질이 생겼다.

그 구상을 요약하면, 당 강령의 대폭 후퇴(6월 19일 당대회에서 강령을 완전히 교체했다) → 참여당과의 합당을 통해 몸집 불리기 →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확보 →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해 연립정부 참여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주요 활동가인 이정훈의 다음 글은 주류 지도부의 구상을 잘 보여 준다(‘진보적 대중정당과 진보적 연합집권전략’).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노동 일부, 진보적 대중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을 1차 목표로 한다면, 이런 정당은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중산층, 중소상인, 민족자본가 등을 다양한 형태로 포괄[하는] … 연합전선적 대중정당 또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이 돼야 합니다.”

“진보대통합 정당의 목표는 운동권 정당을 넘어 과거 민주노동당이 포괄하지 못한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여 집권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당은 물론이고 다양한 개인, 시민단체, 중산층을 과감히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에 동시에 병행 포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적극적인 연합집권전략”을 구사해 “진보개혁 연합정권의 한 축을 담당하여 1단계 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의 통합 시너지 효과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도로 민주노동당”이며 운동권 정당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진보진영 내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9월 25일 당대회를 강행한 까닭이다.

요컨대, 단순히 ‘당권파’의 욕망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 문제였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이명박 정부에 맞서 불가피한 경우 사안에 따라 부르주아 야당과 전술적 제휴를 맺을 수는 있다. 이때조차 진보정치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부르주아 야당의 불철저함과 동요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당권파’는 사안에 따른 전술적 제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르주아 정당과 합당을 시도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다.

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 투쟁의 정치적 돌파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가 현실이 될 개연성이 커질수록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장에서 참여당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당원들 진보대통합은 개혁의 진정한 동력인 노동자 투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래서 진보대통합의 초점은커녕 대상조차 아니었던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 때문에, 진보진영 전체가 여러 달 동안 하지 않아도 될 논쟁과 투쟁을 해야 했다. ‘당권파’의 전략이 진보진영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다행히도, 민주노동당 주류 지도자들과 자민통 내 ‘인권연합’ 계열, 그리고 다함께를 비롯한 당내 좌파 등이 주도한 부결 운동 덕분에 ‘당권파’의 과속 주행에 급제동이 걸렸다(세 세력 말고도 부결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면 제약상 이 글에서는 주로 세력에 관해 다룰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지도자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애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립을 극복하려고 진보대통합을 원했다. 진보 양당의 존재와 경쟁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정치적 분열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 논의의 발원지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의 참여당과의 통합 기도는 진보 양당의 통합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적 분열을 가속시켰다. 이런 상황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 보존 논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까딱 잘못했다는 민주노동당이 분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권영길 의원은 지지 정당별로 편제된 프랑스의 노동조합 상황이 한국에서 재현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진보 양당으로의 분열 고착화를 막고자 했다. 이것은 올바른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기층 노동조합원들과 신생 노동조합 부문(가령,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 서명 운동을 조직했다. 요컨대, 상층 명망가들과 달리 기층 노동자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것은 잘못 설정한 대립 구도였다. 현실의 대립선은 상층 대 기층이 아니었다. 상층과 기층 모두에서 이 쟁점을 놓고 갈랐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당권파’가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동당을 “민주노동 일부, 진보적 대중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이 주축을 이루”는 “운동권 정당”이라고 보는 시각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핵심 기반이 민주노동이라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노동 스스로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김영훈 민주노동당 위원장의 지적과 날카롭게 충돌을 빚는다.

김영훈 위원장의 주장이 맞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을 낳았다. 물론 민주노동당 현장 조합원들이 이 잉태를 주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상근 간부층이 민주노동당의 산모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상근 간부층의 정치적 표현체인 것이다.

그러나 ‘당권파’ 지도자들은 참여당과의 선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듯 질주했다. 이정훈은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노동 등 대중단체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나, 그것은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정당 추진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당권파’ 지도자들이 이른바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을 위해 참여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추진한 것은 마침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역린을 건드렸다.

9월 25일 당대회에서 노동조합 지도자들(권영길 의원, 김영훈 위원장, 나순자 보건노동 위원장, 김경자 전 민주노동당 부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주류 지도부의 구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부결 선동을 했다.

좌파의 구실

다함께는 7월 중순경부터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다함께의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은 6월 당대회 패배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서 시작했다(다함께가 본격적인 운동을 건설하기 전에 이미 일부 당원들과 민주노동당 밖 활동가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

적하고 있었다).

즉,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그 출발이었다. 6월 당대회에서 강령의 대폭 후퇴를 막지 못한 핵심 원인이 민주노동당의 이데올로기적 측면만 고려해 자민통을 하나의 확실히체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질 게 분명하니까 선전이나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접근해 결국 ‘자기만족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운동은 주의 깊게 동맹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민주노동당 상근 간부층이 민주노동당의 산모라면 바로 그 노조 지도자들이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봤다.

노동조합 지도자들 상당수는 노동자 투쟁이 충분히 고양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치 영역(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 투쟁의 정치적 돌파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분열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가 현실이 될 개연성이 커질수록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우려가 현실적 힘이 되려면 기층 노조 활동가들의 반대 움직임이 뒷받침돼야 했다. 그래서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반대 연서명뿐 아니라 주되게 노조 활동가들의 반대 연서명을 조직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이번 당대회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확실히체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줬다. 자민통 내에서도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단계적 통합론(선 진보신당 통합 후 참여당 통합)에 서 있는 쪽이 선 참여당 통합에 반대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의 반대는 이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비록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부결시켰지만, 진보신당 통합파가 통합을 향해 고뇌에 찬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로 하여금 부결로 향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전망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당대회에서 패배했음에도 매우 집요하게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 같다. 해방 후 지금까지

지 인민전선 전략을 전통으로 삼고 있는 데다, 참여당까지 포함한 통합 진보 정당을 건설해 선거에 대응하면 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선거에서 진보의 약진을 바라 마지 않는다. 그것은 필시 노동계급의 자신감 상승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진보가 약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투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일대 도약을 한 것은 총선 직전에 거대하게 일어난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 덕분이었다. 대중 투쟁 덕분에 대중의 의식과 이데올로기가 좌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투쟁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보대통합이 이뤄져 선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참여당과의 통합은 적대 계급 간 통합으로서, 계급투쟁에 해악적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위해 진보적 요구를 민주당의 그것으로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부르주아 정당인 참여당과 통합까지 한다면 오죽하겠는가(6월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며 강령을 대폭 후퇴시킨 바 있다).

그나마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의 과속 우경 주행이 부결 동맹 세력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것은 노동자 운동에 다행스런 일이다.

일부 좌파들은 ‘어차피 민주노동당은 우경화할 텐데 뭐 하러 애써 막느냐’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말이지 계급투쟁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가 좌파에게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한데, 그것은 좌파가 효과적인 대안을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자동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에 오보관연하는 태도를 취한 좌파에게 대중이 정치적 미래를 맡기겠는가.

게다가 이런 발상은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을 진지하게 반대했던 선진 노동자들이 패배할 경우 느낄 낙담과 비통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히 종파적이기도 하다.

이런 태도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머잖아 재개할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 시도에 맞설 대비를 해야 한다.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광주 인화학교 농아원생들을 상대로 자행된 끔찍한 만행들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폭로됐다. 광주시청, 시교육청, 검찰, 사법부 등까지 연결된 더러운 연결망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백 일 넘게 투쟁할 때 광주시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 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해마다 약 30억 원을 인화학교에 지원한 반면, 국립특수학교를 만들라는 대책위 요구는 “예산이 없다”면서 4년이나 거부했다.

사건 초기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이사 네 명이 해임됐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학생들이 항의 표시로 교장에게 밀가루와 계란을 던졌을 때, 검찰은 학생 16명을 입건했고 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광주시청, 시교육청, 법원, 검찰은 성폭력 문제에 무능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니라, 대책위의 인화학교 정상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방해·탄압해 온 것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들의 변명이 역겨운 까닭이다.

새빨간 거짓말

이것은 인화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1996년 평택 에바다, 2006년 성람재단 등 장애인 복지시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친인척 관계로 맺어진 세력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것이 폭로됐다. 그때마다 정권은(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일관되게 가해자를 옹호했고 장애인과 연대단체 들을 탄압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국가가 장애인들을 민간 시설에 수용한 뒤 운영비만 지원하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시설에 수용하면 그들이 사회로 나와서 일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건물 구조, 대중교통, 노동 조건, 교육 제도 등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인화학교 관계자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폭력 직원을 다시 채용한 것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다.

국내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한국 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 단체나 선교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시설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설립자의 후계자들이 운영한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물려받은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을 남용하면서 지역 유지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와 시설주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사이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인간 이하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의 5년여 간의 끈질긴 투쟁이 마침내 ‘법인 허가 취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2007년 시위 모습.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인화학교 대책위는 단지 폐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취소를 요구해서 이를 쟁취해 냈다. 과거 장애인 시설에서 문제가 폭로돼도 관계자 몇 명만 처벌받을 뿐 그들의 일가 친척이 포진한 법인은 그대로 남아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일이 흔했는데, 이를 막아낸 것이다. 또

한 책임을 물어 법인 허가를 취소시킨 것은 향후 장애인 투쟁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 성과를 이룰 확실한 대안을 대책위가 초기에 요구한 **국공립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종종 비리의 ‘도가니’가 되는 까닭은 장애인들이 사회와 격리된 채 교육받거나 일을 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 운동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일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요구해 왔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사내유보금을 수백조 원 쌓아 둔 대기업부터 법이 정하는 만큼이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강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김미연 특수교사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를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에선 너무 비일비재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장애인 성폭행이 없었던 경우를 찾기 힘들 지경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성폭행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치를 떤다.

그런데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면, 영화 곳곳에 드러난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된

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교실과 낡은 책상, 그에 반해 화려하기만 한 교장실. 폭력적이고 감압적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돈과 권력으로 ‘있던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현실. 역겨운 웃음을 주고 받는 재판과 권력기관. 이것은 장애인 시설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시설 비리의 전형

1996년 평택의 에바다 농아원이 그러했고, 2006년 성람재단의 비리가 그러했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된 정립회관의 비리가 그러하며, 2009년 목표 농아원 비리가 그러하다.

사회복지법인인 장애인 시설들은 대체로 족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영화의 모티브가 된 광주 인화학교의 우석재단 역시 족벌 체제다. 이사장의 아들, 딸이 시설의 원장이 되고 학교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되고 교사가 된다.

그들은 연고자가 없는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정부 보조금을 더 받아 내기도 하고 시설·교육 보조금을 착복해 자신의 배를 불린다. 작업장에서 임금을 착복하기도 하고 심지어 에바다에서는 미국으로 강제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족벌 사회복지법인은 지역의 기관들과 유착돼 있다. 시장, 구청장, 경찰, 검찰, 지역 국회의원까지. 법인을 감시해야 할 기관들이 법인과 함께 쿵짝을 맞추고 있으니 10년 전 사건이 다른 시기에 같은 모습으로 재방송되는 것이다.

장애인시설 비리 재방송을 끝내려면 가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는 개인적인 징계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의 족벌 체제 운영을 끝장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공익이사제 도입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한나라당과 보수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을, 폭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뿐만

제해야 한다.

노동자 운동은 이런 장애인 운동과 요구를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은 1987년 말에 시작됐는데,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인적 자원’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여기고, 노동을 자본 축적 수단으로만 보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해야 한다. 지배자들이 봤을 때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교육 경쟁과 착취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교육과 노동 현장에서 배제돼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불편하고 고통스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이라크에 참전했다가 팔다리를 잃은 한 미군이 최첨단 기술 덕분에 수영·서핑 등을 즐기고 국가보훈처 차관보를 지낸다는 사실은 이를 보여 준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외면받는 다수 장애인들은 극빈층에 속하며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

경쟁적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원과 서비스를 배분하는 사회에서만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김중환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정을 환영하며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당대회 결정대로 진보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10월 4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두 가지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대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보대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임기관 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소집·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 결정인 만큼, 그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6월 당대회에서 수임기관에 주어진 임무는 ‘시설합당이 안 되면 이외의 방식으로라도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회 결정을 수용해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 건설에 빨리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이정희 대표가 ‘당대회에서 결정난 대로 잘 해보자’ 하는 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진보진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죠.

인터뷰·정리 박설

박창완 새진보 통합연대 서울공동추진위원장

“반신자유주의 진보 통합을 추진할 것”

우리는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과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연대(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 가임을 신청하기로 했고, 그런 만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서울과 울산에서 통합연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외 지역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당대회 결과와]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까지 다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한 것이 반칙이었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이나 권영길 전 대표가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반신자유주의 깃발을 움켜쥐고 투쟁하기 위해 진보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동의합니다.

안철수 바람이 보여 줬듯이, 정당에 대한 대중의 불신에서 진보정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이 대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위, 아래) 그리스의 반긴축 시위



영국의 반긴축 시위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상층의 위기가 기층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의 저자인 조셉 추나라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의 상관 관계를 설명한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장에는 비현실적 분위기가 감돌았다.

《파인셀 타임스》는 ‘부채 논의가 해결책 합의에 실패하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그리스 국가부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무수한 밀담들이 오갔지만, 공식 입장은 디폴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서없는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두 수석 대표는 “미국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유럽식 계획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따져 보자” 하고 농담했다.

2008년에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고 취한 조치 덕분에 위기 해결에서 국가가 중심 무대를 차지하게 됐다. 국가가 문제 해결에서 보인 무능력과 그 과정에 서 쌓인 부채는 이제 우리의 통치자들 사이에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견 대립 가운데 일부는 7월에 수립된 2차 그리스 구제금융 계획을 승인하는 문제와 관련 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4천4백억 유로 지원 방안을 통과시키자면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도

움을 받아야 한다. 비슷한 힘든 표결이 다른 유로존 의회들에서도 잇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애물들을 건너내더라도, 지원 액수가 너무 적은 점은 이미 명백하다. 특히 그리스 부채 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경제로 번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들이 더 크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다. 은행들은 구제 계획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런 요구를 맞받아쳤다.

이처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위기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07~2008년의 금융 붕괴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반영했다.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의 이윤율이 1980년대 초반에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뒤로 이윤율이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이 회복은 노동자들을 더 혹독하게 쥐어짜는 덕분에 있었고 이러한 사이에 금융 투기와 부채 늘리기가 체제의 주요 자극제 구실을 했다.

이것으로도 자본주의를 더 굴러가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근본적인 문제낫은 이윤율]가 다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

다. 우리의 통치자들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이다.

그 결과 상층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이것은 기층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위기는 대중이 행동에 나서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대중을 마비시킬 수 있다. 지배 사상이 얼마나 일관되는가를 포함해 몇 가지 요소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착취하는 사람들한테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가 명백히 통제 불가능인 상황에서는 이런 동의를 손상된다.

함의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가 당연히 제공하리라고 여겨 온 기초적인 것들조차 위협받고 있다. 주가는 최근 몇 주 동안 가파르게 떨어졌다. 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런 사태가 뜻하는 바는 자신들이 청겨든 연금이나 소액 저축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다.

200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짧은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우리의 통치자들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



“모두 거리로 나서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개척하자”

늘날 그런 통념을 믿는 사람은 훨씬 적다. 위기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을 결정할 때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싸움에 나설 자신감이 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부

족했다. 그러므로 2008년에 투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이 지점에서 위기의 형태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지금 벌어진 것과 같은 심각한 위기가 앞으로도 질질 시간을 끌며 여러 국민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전환점은 노동자들의 분위기를 바꿀 잠재력을 창출한다.

1929년 월가 주가 폭락 이후 미국에서 중요한 투쟁이 일어나기까지 4년이 걸렸고, 프랑스에서 대중파업이 발전한 것은 또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였다. 우리가 위기의 처음 충격에서 회복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째다.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최종 요소는 바로 우리 지배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보수당 총리 마거릿 대처는 한 번에 한 노동자 집단만을 공격해 각개격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데이비드 캐머런은 연금과 임금 문제를 두고서 노동자 전체를 공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직장에서 정치의식이 덜 발전한 사람들마저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행동에 나서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그리스에 더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는 은행들

경제학자 **그레이엄 터너**가 왜 그리스 채권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화성은 상관 없고 돈이나 값이라고 재촉하는지 설명한다.

그리스 경제가 지금 더 깊은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서방 열강이 그리스한테 무조건 채무를 이행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 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은 최근에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부로 80억 유로를 그리스에 빌려주는 문제를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그러나 이 액수는 그리스의 올해 재정 적자가 GDP의 8.5퍼센트 수준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스은행(중앙은행)은 재정 적자가 사실은 13퍼센트 정도까지 치달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제는 CIA마저도 우려하고 있다. CIA는 “위기를 맞은 그리스에서는 계속되는 거리 시위가 폭력 사태와 반란으로 치달을 수 있고 ... 그리스 정부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세무 공무원들이 파업 중이다. 중소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인상에 반대에 그것을 가격에서 빼버렸다. 그리스 경제는 올 초부터 급격히 악화했다. 이런 경제 악화로 적자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리스는 파산했다. 돈이 썰물처럼 그리스를 빠져나가고 있다. 겨우 2년 새 은행 예금의 20퍼센트 이상이 스위스와 독일에 빠져나갔다. 그리스 은행들이 망하면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에 대한 통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도 있다.

한편 그리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의 총 부채액은 그리스 GDP의 1백47퍼센트 수준이다. 이에 견줘 영국의 정부 부채는 82퍼센트 수준이다. GDP 대비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말까지 1백69퍼센트를 찍을 때에 다. 내년에는 아마도 1백94퍼센트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시장이 스페인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몇 달 내에 유럽 전체에서 심각한 정치적 격변이 벌어질 수 있다.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 정종수

디폴트 이것이야말로 서방이 그리스한테 빚을 갚으라고 채권하는 이유다. 그리스 긴축의 진정한 동기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세 나라의 많은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투자자들을 겁먹게 만들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더 많은 돈을 빼내게 만들 수 있다. 그리 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은행들도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유럽의 통치자들은 이것이 결국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까 봐 몹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많은 문제가 남는다. 유로존에 매여 있는 한 그리스는 독일 공업력의 상대가 못 된다.

따라서 현재의 협상이 ‘질서 있는’ 디폴트와 실질적인 부채 탕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리스의 불황은 계속될 것이고 실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디폴트는 아마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할 것이다. 유로존 정부 관리들한테 이것은 퇴보로 비칠 것이지만 많은 은행들한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는 현재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워싱턴의 관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시장이 스페인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몇 달 내에 유럽 전체에서 심각한 정치적 격변이 벌어질 수 있다.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 정종수

디폴트 이것이야말로 서방이 그리스한테 빚을 갚으라고 채권하는 이유다. 그리스 긴축의 진정한 동기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세 나라의 많은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투자자들을 겁먹게 만들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더 많은 돈을 빼내게 만들 수 있다. 그리 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두 나라의 은행들도 대단히 취약해질 것이다.

유럽의 통치자들은 이것이 결국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까 봐 몹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많은 문제가 남는다. 유로존에 매여 있는 한 그리스는 독일 공업력의 상대가 못 된다.

따라서 현재의 협상이 ‘질서 있는’ 디폴트와 실질적인 부채 탕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그리스의 불황은 계속될 것이고 실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디폴트는 아마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할 것이다. 유로존 정부 관리들한테 이것은 퇴보로 비칠 것이지만 많은 은행들한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공포와 혼돈에 협사인 유로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몇 주 전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유로존 위기를 보면서 “공포심과 함께 지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다.

한편으로, 스위스 은행 UBS는 만약 유로존이 붕괴하면 그 첫째에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의 총생산량이 20~25퍼센트 줄어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유럽연합은 금융시장, IMF, 미국의 압력 아래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개입을 준비 중이다. 달팽이 걸음으로 말이다.

지난주 독일 의회가 최신 그리스 ‘구제’ 금융을 승인한 것은 일부 진전으로 평가받았다. 언론들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디링케(좌파당)를 제외한 모든 주류 정당들이 지지한 안이었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다. 다만, 메르켈은 자신의 보수·자유주의 연합 소속 의원을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난립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 안이 통과되자마자 쏘모없이졌다는 것이다. 이 안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2010년 5월 그리스가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마련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독일이 특히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대출액 가치의 삭감을 수용하는 것이다.(이런 ‘깍기’의 정확한 액수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조처들은 지난 7월에 정해졌지만, 그 이후로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이제 모든 이는 그리스가 언젠가 디폴트(채무불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신 그리스 정부는 유럽중앙은행, 유럽위원회, IMF 등 ‘3인방’이 정한 재정적자 삭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 경제 규모가 올해 5.5퍼센트, 내년엔 2퍼센트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 국가의 조세 수입도 줄고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돈도 더 많이 든다.

그러나 자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도, 그리스인들의 고통에 동정을 보내지도 않는 ‘3인방’은 파산한 총리 파판드레우를 쫓

아쳐 더 많은 긴축 정책을 강요하려 한다.

그럼에도, 그리스는 미래에 디폴트를 할 것이다. 지난여름 동안 금융시장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유로존 금융 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나라들에 가장 많은 돈을 대출한 집단인 유럽 은행들이 위협받고 있다.

이 은행들은 2000년대 중반 신용 거품 때 창출된 악성 채무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IMF는 유로존 위기로 이 은행들이 추가로 2천억 유로의 손실을 봤다고 추정했다.

최근 IMF와 세계은행은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7월에 합의된 그리스 지원안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놓고 논의했다.

공포심과 지루함

먼저, 그리스에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은 대출금 가치의 50퍼센트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행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유럽재정안정기금은 4천4백억 유로에서 최악의 경우 2조 유로까지 확충되어야 할 수 있다.

애초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은 규모가 너무 작아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은 대국 경제로 위기가 확대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받았다. 이제 실제로 위기가 이들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이 더 크고 강력하게 된다면 은행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확대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 은행 구제 자금의 기준으로 봐도, 2조 유로는 큰 돈이다. 이 기금을 보충하려면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도 신용등급 하락을 겪을 것이다.

또, 유럽연합법도 걸림돌이다.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를 낳은 금융상품을 이용해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확충하지는 못 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 이것이 둘째 문제인데 —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독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확충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유로존은 갈수록 독재론적 위기가 되 가는 위기를 눈앞에 두고 마비돼 있다. 그리스인들의 고통에 동정을 보내지도 않는 ‘3인방’은 파산한 총리 파판드레우를 쫓

번역 : 김용욱

기간
마르크스21
11호 2011년 가을
가격 : 16,000원

www.marx21.or.kr



신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오늘의 정치 전망과 혁명적 전략·전술 / 자본주의의 대안·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정집 I

통합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 김하영
금융 위기와의 민스키 · 이창구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 강종훈

정집 II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변모하는 인종차별 · 리처드 시모어
문화와 다문화주의 · 제프리 랜킨스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생태학 · 김종환

마르크스주의 고전 읽기

VII 레닌의 《국가와 혁명》 · 차승일

서평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지역 대안론의 의미와 한계 · 장영호

피드백

사노위 실패의 교훈과 혁명당 건설 투쟁의 연속성 · 이병호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일련번호 424, 인터넷,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점문고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하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정가/도록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후원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리비아 혁명 논쟁

리비아 혁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사이먼 아사프 레바논 출신 영국 사회주의자

리비아 혁명은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 이집트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공격하는 동안, 리비아에서는 서방 정부 지도자들이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이 애초에 서방 열강의 종속 정권을 세우려고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또, 서방 정부 지도자들이 잘난 척하고 있지만, 새로운 리비아를 자기 뜻대로 만드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리비아의 도시와 마을 들을 뒤흔들었던 반란의 물결은 호스니 무바라크와 벤 알리의 몰락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것이었다. 소규모 활동가 집단들이 시위를 벌였고 중앙 광장들을 리비아판 ‘타호리르 광장’으로 만들려 했다. 시위들은 평화로웠지만 참가자들은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카다피 정부가 엄청나게 잔인하게 탄압하자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카다피 정부의 끔찍한 반혁명 움직임에 반발해 무장 항쟁이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 혁명을 시작한 청년 혁명가들의 목표와 열망 — 모든 외부 개입 반대를 포함해 — 이 무시됐다.

이 청년들 중 많은 이가 혁명이 시작된 뒤 몇 주 사이에 죽임을 당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정부의 체포 물결 속에서, 중요한 유전이 자리잡은 동부 도시 브레가와 라스 라누프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죽었다. 2월 17일 ‘세바브’, 즉 청년들의 패배가 발생하자 리비아 혁명은 튀니지나 이집트 혁명과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전환점

리비아 혁명의 두 번째 전환점은 카다피 정권 이탈자들이 혁명의 수도인 뱅가지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막 출범한 과도국가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과도 정부’를 대표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뱅가지에서 벌어진 혼란들은 반란의 원래 지도자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현 과도국가위원회 지도자들은 서방의 지원 덕분에 지도자로 행세할 수 있었다. 카다피군의 반격이 강경해지면서 그들의 영향력도 강해졌다. 그들은 서방 정부들과 맺은 동맹 덕분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 각종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청년 혁명가들은 내놓을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청년 혁명가들이 패배하면서 리비아 혁명은 외곽됐다. 리비아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려는 열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카다피, 그 아들과 측근 인사 등 정권의 우두머리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여겨지게 됐다.

인도주의적 개입

리비아의 혁명의 열망이 좌절되자 서방 제국주의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고할 기회를 잡았다. 서방 열강들에게 리비아 혁명은 인도주의적 개입을 되살릴 기회였다. 인도주의적 개입 독트린의 주된 내용은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방의 리비아 개입을 지지한 사람들은 만약 카다피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른 독재자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제국주의의 진정한 의도를 무시했다.

카다피가 반란을 진압하려 탱크를 보낼 준비를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군(과 카타르와 아랍 에미리트군)은 혁명 운동을 진압하려고 바레인으로 진격했다. 그



2월 말 뱅가지를 해방시킨 청년 혁명가들 여전히 남아 있는 진정한 혁명의 원동력

러나 바레인 진주 광장에서 벌어진 학살극은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됐다.

서방 제국주의는 이라크 전쟁의 악몽을 펼쳐내려고 개입을 정당화하는 미사여구를 바꿨다. ‘민간인 보호’와 같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현들이 ‘충격과 공포’를 대신해 사용됐다. 또 나토는 더는 서방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아랍의 봄의 일부로 여겨지게 됐다.

서방 열강은 리비아에 개입하는 진정한 동기를 감추려고 노력했다. 반란이 발생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영국 정부는 저격용 소총을, 스페인은 고성능 포탄을 판매했고,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카다피 정부의 협력을 받았고, 미국 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카다피의 악명 높은 하미스 연대를 무장시키는 계약을 맺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러나 나토 개입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와 영국 군인 수백 명이 리비아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계획했다. 반군 수천 명은 해외 나토 기지에서 훈련을 받았다. 나토는 사실상 반군의 공군으로 활동했다.

서방이 리비아에 개입한 주된 목적은 석유가 아니었다. 카다피 정부는 이미 서방 기업들에게 관대한 조건으로 석유를 개발할 기회를 줬다. 이 전쟁의 주된 목표는 프랑스가 튀니지에서, 미국이 이집트에서 망신을 당한 후, 북아프리카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위치를 재고하는 것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나토의 한 고위 관료는 … 저장도 비행금지 구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 이제 우리가 리비아를 소유한다”고 보도했다. 확실히 리비아는 서방 기업들에게 활짝 열리게 됐

다.

그럼에도 서방 열강은 아직 리비아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서방 정부들은 과도국가위원회의 지도자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리비아 거리를 통제하지는 못한다. 또, 카다피 정부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혁명가들이 서방 군사 개입을 요청하게 만들었던 원인도 사라지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

리비아 동부의 이슬람주의자들은 반란군의 중요한 일부로 반란에 조직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과도국가위원회의 친서방 지도자들은 항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이슬람주의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이제 이슬람주의자들과의 동맹이 깨지고 있다.

아랍 혁명이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독재자를 무너뜨리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슬람주의자가 감명을 받았다.

나토의 군사 개입이 시작된 뒤에도 이슬람주의자들은 반란군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이런 지휘관들 중 상당수는 알카에다 소속 집단으로 잘못 알려진 리비아이슬람투쟁그룹 출신이다.

이슬람주의자들이 서방에게 얼마나 큰 골치거리일 수 있는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한 고참 이슬람주의자는 과도국가위원회 지도자들이 측근을 석유 장관 등 요직에 앉히는 정실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혁명을 강탈”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이슬람주의 운동은 모순적이다. 그들은 독재 정부에 대한 분노와 이 정부를 지원하는 서방 열강들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대변할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경제 안정’을 바라고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타협(서방에 대한 종속이 아니라)을 꾀할 수도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대중의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가 근본적 사회 변화를 바라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향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반면에, 과도국가위원회 내의 친서방 인사들은 구질서의 많은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며, 그들 자신도 카다피 정부에서 누렸던 옛 지위를 회복하려 한다. 과도국가위원회의 통치를 받는다면 리비아는 서방에 종속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슬람주의자들의 통치 아래 리비아는 서방과는 좀더 거리를 둘 것이다.

인종청소

미스트라의 반란은 다른 동부 도시들의 패턴과는 달랐다. 혼란스런 뱅가지와 달리 이 신도시의 투쟁은 좀더 잘 조직돼 있었고 파견된 정부군을 함정에 빠뜨리고 무찔렀다.

그러나 다른 반란군 통제 지역과 마찬가지로 투자들은 나토 공군에 의존해 트리폴리로 향하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다.

미스트라 전사들은 전투에서 용맹함으로 명성을 얻었고(프랑스 해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트리폴리 진격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미스트라 투자들은 최초로 구질서 인사들이 신정부를 통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스트라 위원회는 과도국가위원회의 정체성을 의심했고 종종 그들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스트라의 승리는 카다피 정권의 몰락 후 미스트라인들이 취한 태도 때문에 빛이 바랬다.

미스트라 투자들은 (많은 경우 이번 전쟁과 전혀 상관 없던) 아프리카계(피부색이 검은) 리비아인들을 카다피 정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미스트라 주거지뿐 아니라 이웃한 마을인 타웨르가에서도 내쫓았다.

이런 인종 청소는 서부 산악 지대에서도 발생했다. 성공적 게릴라 전투를 벌였던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들은 부족민의 일부가 정부 편에 섰던 투아레그족을 공

격했다.

이런 속청은 2000년 카다피 정부가 흑인 3백 명을 집단 성폭행했던 만행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많은 이가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해방의 상징에서 옛 억압 질서와 인종차별주의의 지속으로 여기게 됐다.

혁명은 끝났는가?

초기 리비아 반란에서 나타난 대중 시위들은 점차 수천 명이 싸우는 무장 투쟁에 의해 밀려났다. 그러나 대다수 리비아인이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을 본받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하다.

혁명들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키기 마련이다. 혁명 과정에서는 거리, 공장, 사무실, 경제와 자원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도전이 공개적으로 분출할 수밖에 없다.

수백만 명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의 의식도 변화시키는 활동에 뛰어드는 것이다. 리비아에서는 이 과정이 중간에서 멈췄다.

처음 외국군 지원 제안이 대두했을 때 반군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주요 대도시에 접근하면 그곳들에서 반정부 항쟁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토와 다른 많은 이는 이 가능성을 기각했고 트리폴리 같은 대도시들은 카다피 정권의 대들보라고 주장했다.

원래 트리폴리 공격 계획은 트리폴리 사람들의 반란을 기대하지 않고 작성됐다. 그러나 수많은 트리폴리인은 반군의 진격 계획을 알게 되자 녹색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트리폴리 함락 작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렇게 대중의 구실이 다시 중요해진 것은 리비아 혁명에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보여 준다. 2월 17일 혁명을 낳은 조건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발생할 투쟁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많은 반란군은 서방 열강과의 동맹을 필요에 의한 일시적 동맹으로 생각한다. 리비아 전쟁은 끝났고 서방 열강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번역: 김용욱

전문은 〈레프트21〉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월 말 뱅가지에 걸린 외국군 개입 반대 현수막

아프가니스탄 점령 10년

서방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재앙의 전쟁

이른바 “정의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에 해방이 아니라 악몽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디스 오어는 말한다.

매일 밤 40여 차례 군사 작전이 벌어진다. 이 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에서 왔고 역사상 가장 정교한 장비로 무장했다. 이 군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10년 동안 전쟁을 벌인 끝에 부유한 나라의 첨단 군대들이 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11년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다.

9·11 공격 직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범인을 숨겨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나토의 지지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2001년 10월 8일에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었다. 사실, 정확한 사망자 숫자를 알 수가 없다. 점령자들이 세지 않기 때문이다. 20만 명이 내부 난민이 됐고, 3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점령군 사망자 수는 2천6백70명으로, 그중 1천7백17명이 미군, 3백82명이 영국군이다.

핵무장한 아프가니스탄의 이웃인 파키스탄도 전쟁에 휩쓸렸다. 미국 정부는 무인 정찰기를 사용해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지역을 조직적으로 폭격했다.

미국에 위치한 군사 기지에서 이들 무인 정찰기를 조종했는데, 버락 오바마는 이들의 사용을 크게 늘렸다. 무인 정찰기의 폭격 때문에 이 지역에서 2천9백 명이 죽었다.

잊혀진 전쟁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잊혀진 전쟁이 됐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만 언론들의 주목을 받는다.

예컨대, 얼마 전 8월에는 자살 폭탄을 장착한 탈레반 전사들이 카불의 영국 대사관에 침입했고 대사관 직원이 안전방으로 대피하자 탈레반 전사들은 8시간 동안 대사관을 점거했다. 또,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인 라바니가 암살됐다. 그는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인 핵심 관료 중 하나였다.

이런 충격적 소식을 제외하면 사망자 소식, “드디어 고비를 넘었다”는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고지를 놓고 옆치러뒤치락하는 단편적 소식들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동기는 계속 변했다. 한때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해방이었다. 전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탈레반 아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이 “존엄성, 평등, 인간성의 측면에서 모두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페미니스트인 말랄라이 조야는 그런 식의 논의가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입에 발린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야가 옳다. 2011년 점령 하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에서 여성이 살기 가장 위험한 나라다.

지난 10년 동안 저들이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공수포에 그쳤다. 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부패 근절을 위해, 헤로인 생산을 막기 위해, 본국을 테러 공격에서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백 년 동안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이 돼 고통받아 온 가난한 나라에게 서방 국가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연합군은 매일 인명 살상을 저지르고 그런 사실을 감추려고 노력했다. 최근 나토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의 고통 점령군이 말한 ‘민주주의’, ‘여성권’, ‘안정’이 어디에 있는가?

연합군이 민간인 5명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 2010년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한 달 동안이나 사건 발생 사실을 부정했다.

당시 연합군 특수부대 병사들은 여성 3명과 남성 2명을 살해한 후, 희생자들의 사체에서 총알을 수거하고 시체의 총상에 알콜을 부어 소독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주책에 침입했던 흔적을 지우려고 벽의 총알 구멍을 메우고 복도 페인트를 다시 칠했다.

카불 남쪽의 가르데즈 근처에서 발생한 이 살인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조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조사자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처음에 나토는 연합군이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우겼다.

많은 언론은 아프가니스탄을 중세적인 후진국가로 묘사한다. 아프가니스탄 경제와 사회기반시설은 파괴됐고 인구의 42퍼센트가 한 달 수입 6.5파운드(약 1만 2천 원) 이하로, 그들은 끔찍한 빈곤에 고통받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 이런 지경이



파병 병사 2천6백70명이 죽었다.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과 점령의 결과다. 19세기 영국 침략부터 1980년대 러시아 침공까지 제국주의 열강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전장으로 삼아 서로 다투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나쁜 전쟁’인 이라크 전쟁 대신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좋은 전쟁’으로 팔아먹으려 했다. 이런 식의 구분은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아프가니스탄 침략이 이라크 침략처럼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저지른 불법 침략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영국인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자, 양국 정부는 ‘우리 군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사병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성장해 왔다.

서방 정부 지도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국 병사의 생명과 안위조차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를 거둘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값비싸고 끔찍한 수렁이란 진실을 감추려 한다. 그들은 증파, 외교 활동, 대게릴라 전략 등 다양한 군사 전략을 시도했다. 심지어 연합군을 공격하지 말라며 아프가니스탄 군벌들에게 돈을 주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

이와 그 주변의 군벌 동맹들은 부정 선거를 저질렀고 외부 지원금을 빼돌렸다. 이 정권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패한 정권이다.

종반전

이제 연합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자신들이 파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집단인 탈레반과의 협상을 바란다.

탈레반은 외국군 점령에 맞선 저항을 주도하는 집단이 됐다. 외국군 15만 명은 탈레반을 파괴할 수 없었다.

연합군에게 2011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반전이다. 2014년 아프가니스탄군에게 치안권을 넘긴다는 목표 아래 모든 나토군이 병력을 줄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5만 3천 명을 증파했기 때문에 2011년 말에도 여전히 부시 정부 때보다 더 많은 병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군에게 치안권을 넘기겠다는 계획도 불확실하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군 훈련을 위해 나토군 영구 주둔 기지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려고 입대한다. 많은 이가 첫 월급을 받은 후 탈영한다. 부패한 현 정부를 방어하려는 의지가 강할 리가 없다.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 있고 또 다른 전쟁에서 실패하면 자신의 약점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아 개입이 서방 국가들에게 중요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혁명 때문에 미국과 서방 동맹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과 서방 열강들은 다시 한 번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리비아에 개입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리비아 반란군 편에 서면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보여 주듯이 제국주의 열강의 군사 개입과 인도주의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모든 외국 점령군이 물러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재건을 시작할 수 없다.

주디스 오어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의 편집인이다.
번역: 김용욱

파병 한국군 즉각 철군하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동두천에서도 미군이 18살 소녀에게 엽기적 만행을 저지르고 강간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람들은 ‘뺨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 정부·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그런 만행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일은 단지 한 군인의 일탈 행위일 뿐 아니라 제국주의 군대의 억압적인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일로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분노를 생각하면, 미국의 폭압적인 점령을 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매일 매일 느껴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지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지

난 10년간 미군 점령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인들이 학살 당하고, 집을 잃고, 빈곤에 빠지는 악몽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그런데 한국군은 이러한 미군의 점령을 돕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재건’라는 말로 감추려 해도 한국군이 ‘점령군’이라는 본질은 가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국군 기지가 울해 들어서만 열 차례 넘게 한국군 기지를 로켓포 공격을 당했다. 김선일 씨, 윤장호 하사, 샘물교회 선교사들과 같은 비극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80퍼센트 지역을 통제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점령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미국 지배자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미군이 철군한 지



파병 한국군도 점령군의 일부다.

역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명박이 “국가 브랜드”를 위해 파병한 것이라며 피비린내 나는 돈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계속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정선영

자본주의와 복지 ⑤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⑤ 좌파적 대안

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유럽 복지국가들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가 그런 조건에 도달한 지는 오래됐다. 경제가 위기임에도 한국의 1천대 기업은 2010년 한 해에만 1백3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이것만으로도 최근 거론되는 무상복지를 모두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또 이 돈이 적절히 투자되지만 한다면 공공서비스 부문과 각종 소비재 산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다. 복지 확대 요구를 두고 "미래 세대에 게 빚을 지을 것"이라거나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복지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났던 시기에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다. 심지어 일부 자본가들조차 보편적 복지 확대가 "최고의 장기 투자"라며 환영했다.

둘째, 그렇다고 자본가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스스로 내놓은 적은 없다. 복지 확대에 가장 관대하던 시절에조차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애썼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뒤에 누린 장기 호황이 끝난 1970년대 이후 후자의 경향이 강화됐다. '장기 투자'는 커녕 당장 일 년 앞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보다 나중에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생존 대책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계급투쟁, 즉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근본적인 동력

이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았다. 계급투쟁의 부침에 따라 복지 수준도 부침을 겪었다. 영국 노동자들이 커다란 패배를 겪은 1980년대에 영국의 복지 제도는 대폭 후퇴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1990년대 중반에 정부의 공격에 맞서 기존의 복지 제도를 지켜냈다. 한국에서는 노동계급이 눈을 뜬 1987년을 전후로 각종 복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됐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 복지를 확대하려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셋째,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개혁주의적 노동자 정당(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복지국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지 못한 곳에서도 노동자 투쟁이 성장하던 곳에서는(예컨대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복지 제도들이 도입되고 확대됐다. 물론 이런 투쟁과 더불어 대중적 노동자 정당이 성장하고 집권한 유럽에서 복지 제도의 발전이 훨씬 안정적이었다.

결국 일반화하자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이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데 더 근본적인 동력이었다. 무엇보다 이 정당들의 성장과 집권 자체가 노동자 투쟁의 성장과 급진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바람과 그 투쟁의 결과를 단순히 반영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복지국가 형성기부터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자 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에서 집권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를 대



2008년 메이데이 - 복지확대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노동자들 무상복지를 실현하려면 노동자들이 이 운동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대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의 성장과 집권이 노동계급의 자신감을 고무했다.

이 점에서 오늘날 진보진영 내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민주노동당 등 개혁주의 노동자 정당의 성장과 부침에 대해(예컨대 진보대통합 논의 등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른 한편에서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우선 순위를 두고 끊임없이 동요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지 않으려 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에게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수용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던 시기에도 자본가들과의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음으로써 근본적인 계급 세력 균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에서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선거에서의 성과만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태도도 잘못이다. 민주당과의 동맹은 선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말과 달리 실천에서 복지(노동자 계급의 이익)보다 경제 성장(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집권 시절뿐 아니라 지금도 민주당은 한미FTA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고 비정규직 대책에도 소극적이다.

앞서 내린 결론들에 비춰 오늘날 한국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요구는 첫째, 많은 노동자들이 그것을 실질적 개선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어야 한다. 민주당과의 초계급적 동맹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노동조합

의 대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후퇴시킨다면, 노동자들은 그것을 위해 투쟁에 나서려 하기보다는 수동적 지지에 머물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복지 확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대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마치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되레 노동자 투쟁을 기성 정치의 논리에 종속시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을 광범하게 단결시키는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정규직 양보론을 수용하는 '사회연대전략'이나 노동자가 보험료·세금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건강보험하나로운동', '보편적 증세론' 등은 문제가 있다. 이런 요구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투쟁의 힘을 약화시킨다.

셋째, 다른 모든 거대한 사회 개혁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복지 개혁 과정을 실현하는 데서도 누가 중간계급의 지지를 끌어내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특히 이들의 지지 여부가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도적 요구

그러나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런 개혁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주·부자들에게서 재원을 마련하는 '보편적' 복지 확대 요구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거꾸로 보편적 증세 같은 대책은 오히려 이들도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단지 노동자 정당의 성장뿐 아니라 실제로 기업

주·부자 들의 저항을 물리칠 힘을 가진 노동자 투쟁이 강력해져야 한다.

실현 가능하면서도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요구들은 더 광범한 계급투쟁을 고무한다. 이런 요구들을 내걸고 단결할 수 있을 때 노동자들은 훨씬 잘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이 커지고 실현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노동자들의 요구는 확대·발전할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모든 거대한 노동자 투쟁에서 발견된 보편적 사실이다.

일부 좌파는 최근의 복지국가 논의가 계급적 불만을 체제 내 개혁으로 수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대중에게 필요한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따라 생산하고 분배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체제에서만 이런 일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를 쟁취하려는 요구와 운동은 반자본주의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복지 확대 요구가 부분적이거나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복지 확대 요구는 자본가들의 이윤 확대 요구와 충돌한다.

변혁적 좌파의 과제는 이 운동이 그런 충돌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 둘 사이에 가교 구실을 할 과도적 요구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레프트21〉은 창간 당시부터(2009년) 그런 요구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평균임금의 50퍼센트), 실업급여 인상, 청년실업 해소, 무상임대주택 확대 등이 그런 요구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제시돼 온 '부자 증세'도 필수불가결한 요구다.

최근 참여연대, 민주노총, 다함께 등 4백2개 단체가 함께 만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도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예산 확대' 요구를 내걸고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구들이 기층의 운동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장호중

오늘날 복지국가를 쟁취하려는 요구와 운동은 반자본주의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복지 확대 요구가 부분적이거나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식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요구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하층 중간계급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는 요구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지침을 내린 것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용어로 쓰였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베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학살하고, 사사오입이라는 선거 부정까지 저지르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북한 스탈린 체제에 대당하는 것으로 내세운 것이 ‘자유민주주의’였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1972년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을 헌법 전문에 삽입했다. 이것이 우파와 뉴라이트가 찬양하는 ‘헌법 정신’의 기원이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운동과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김대중 같은 온건한 자유주의자들까지도 탄압했다.

그 뒤를 이은 정권들도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18 광주항쟁에서 공수부대까지 투입해 학살을 벌였다. 한국의 우파는 중동에서 학살을 벌이다 쫓겨난 독재자들을 욕할 처지가 못 된다.

노태우 정권은 1987년 항쟁의 성과를 되돌리려고 1989년 봄부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에는 군대까지 투입했다. 이런 독재자들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자신을 정당화했다.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악법인 이 나라의 국가보안법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지금 한국의 우파들이 고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원래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저급한 것을 가리킨다.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한국현대사학회 등 뉴라이트와 우파들의 시도



2008년 촛불집회 독재를 미화하려는 우파들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는 반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원래의 자유민주주의(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조차 근원적 한계가 있다.

첫째, 19세기 중반부터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에 독립적인, 또는 부르주아지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 덕택으로만 발전할 수 있었다.

부르주아지의 보수성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혁명 과정에서 탄생했는데, 봉건제에서 조금씩 힘을 키워 가던 신흥 부르주아(자본가)들이 이 혁명들을 이끌었다. 부르주아지는 봉건 지배자들에 맞서는 투쟁에 농민과 도시 하층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명분을 발전시켰다. 이것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이 시기의 부르주아지는 진보적이었고 혁명적이었지만, 새로운 체제의 지배

계급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급격히 혁명성을 잃어 갔다. 1848년 유럽 혁명 때는 부르주아지의 보수성이 일반적 현상이 됐다. 부르주아지는 기존 봉건 질서와 타협했다.

자본주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노동계급이 성장했고, 부르주아지는 자신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노동계급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보통선거권조차 영국에서 1928년에야 시행됐고, 재산에 따른 차등이 없는 1인1표제가 시행된 것은 1948년이었다. 이조차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다.

한국에서도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 덕분에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에서조차 행정기관의 수장과 입법

기관을 제외하면 선출되지 않는다. 치안·사법·군사기구들은 대중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만 대중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평등의 확산과는 별개로 경제적 불평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한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는 극소수 자본가들의 손아귀에 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생산할지는 대중의 의지와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결정된다. 이런 정치와 경제의 분리 덕분에 자본가들은 직접 통치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극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라는 레닌의 지적은 오늘 날에도 유효하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민주주의

의 참모습이 발현되려면 민주주의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이를 현실에서 보여 준,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노동자 권력이었던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소비에트가 그것이다.

파리와 러시아의 대중은 잠깐 동안이나마 사회를 직접 통제했다. 첫째,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과 상비군이 해체되고 대중이 자발적으로 무장했다. 둘째, 모든 국가기관은 대중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됐고, 대표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일하며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으면 바로 소환됐다. 무엇보다 집단적이고 민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노동 대중이 생산과 경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졌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틀을 뛰어넘어서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정치·경제 권력을 장악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차승일

이집트 혁명과 연속혁명의 중요성

레온 트로츠키가 발전시킨 연속혁명 이론은 이집트 혁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한다.

지난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해 온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올해 초 대중 시위와 파업에 밀려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현재 이집트 군부는 물리력을 앞세워 타호리르 광장을 다시 장악하고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을 불법화하고 있다. 무바라크가 물러났으니 혁명은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혁명이 정치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격변으로 나아갈 순 없는 것인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순 없는 것인가?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이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보다 산업이 불균등하게 발전했다. 노동자들은 이제 막 독립 노조를 결성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결국 이집트 노동계급은 사회주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인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은 우리가 이집트나 그 밖의 국가들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로츠키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을 경험한 데 바탕을 두고 연속혁명 이론을 발전시켰다.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은 멘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분열해 있었다. 멘셰비키는 혁명이 일어난다면 1640년대 영국과 1789년 프랑스에서 그랬듯이 중간계급 중 진보적인 일부가 지도부 구실을 할 것이므로 노동자들은 혁명을 지원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는 러시아 부르주아가 노동자들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르 국가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닌은 1917년 4월까지 ‘혁명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고 자본주의 또한 더한층 발전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변화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로츠키는 사뭇 다른 이론을 발전시

켰다. 트로츠키는 노동자들이 핵심이라는 레닌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비록 경제가 후진적이고 노동자 수가 적을지라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당시 러시아는 영국 같은 나라들의 발전 경로를 밟지 않았다. 대신 서유럽의 최신 기술이 러시아 공장에 수입됐다. 이 덕분에 노동계급이 비록 전체 인구 중 소수였을지라도 몇몇 지역에 밀집돼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농민과 같은 집단의 지지 속에서 혁명을 지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노동계급

트로츠키는 만약 노동계급이 기본적인 민주 개혁을 요구하는 혁명적 운동의 일부라면, 혁명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동자들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내세우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로 노동자들의 소비에트가 구성된 1905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소비에트는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운영된 평의회이자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민

주주의였다.

연속혁명이 곧 혁명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혁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연속적이다. 첫째, 혁명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자본주의의 특성상 국제적 규모로 확산된다. 이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단지 트로츠키의 희망사항이었던 것은 아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독일과 헝가리 등에서 봉기가 일어나는 데 일조했다. 혁명은 또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의 상호작용에 자극받아 더 근본적인 사회적 격변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연속적이다.

2011년의 이집트 사회는 트로츠키가 묘사했던 1905년의 러시아 사회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유사점도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로서 이집트는 경제 발전이 뒤쳐져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의 모습도 갖고 있다. 몇몇 지역에 전투적인 노동계급이 있지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또한 굉장하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마할라 섬유 공장 같은 거대 공장에

고용돼 일한다. 1917년 러시아에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푸틸로프 공장 같은 거대 공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돼 일했다.

이집트 노동계급은 2월 8일에 총파업을 벌이는 등 전투적 행동을 통해 혁명을 전진시키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해 왔다. 그러나 이집트 지배계급은 혁명을 선거와 개헌으로 제한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려 애썼다. 혁명은 잘 짜인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전진한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은 이집트의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집트 노동계급이 혁명을 수행하고 이 투쟁이 이집트를 넘어 국제적으로 계속될 때만 이집트 혁명의 성과가 영구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레이 필링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번역: 조명훈

김형우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희망버스 투쟁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1차 희망버스 때 정리하고 문제가 해결됐어야 합니다. 5차까지 왔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5차 희망버스는 중요합니다. 다시 투쟁의 불씨를 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수없는 투쟁들이 끝까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도부가 중간에 타협을 하거나 운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패배감 같은 게 쌓여 왔습니다.

‘희망버스’라고 표현되는 사회단체·개인들과 조직 노동자들이 완벽하게 만나야 합니다. 5차에서 민주노총이 민중대회를 계획한 것은 나아진 점입니다. 그간은 못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누가 주도하는가’를 두고 논란을 빚지 말고 진작 만났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간 노동조합 운동은 너무 수세적이었습니다. 양보교섭을 하고 심지어는 직권 조인도 했고, 조합원들은 지도부에 의존했습니다. 위원장이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타협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중공업 채길용 집행부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희망버스는 역동적이고 공세적이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느끼는 패배감은 조합원들의 탓이 아닙니다.

관성에 젖어 표를 먹고 사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할 활동가들이 관성화되고 후퇴한 것이 문제입니다.

활동가들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서 보면, 건강한 대의원이 있으면 그 노조의 선거구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지회장이



4차 희망버스 이런 투쟁의 목소리를 확대·강화할 활동가들과 진보정치의 구심이 탄탄해져야 한다.

있으면 지회가 건강해집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참여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노동자 운동의 목표에 기초해

투쟁을 밀고 나가야지, 이들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진보진영이 제 구실을 못 하면, 현장이 정치 혐오증에 걸려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이나 참여당이 희망

버스에 오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주체들의 투쟁을 강조합니다. 투쟁이 있는 곳에 연대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버스도 사실 김진숙 지도위원이 아니었으면 불씨를 당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리하고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점도 잘 봐야 합니다. 정리하고 작업장에서선 항상 비정규직 해고가 앞서 일어났습니다. 희망버스도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10월 22일] 비정규직대회가 중요합니다. 비정규직대회, 11월 노동자대회로 이어지는 투쟁을 계속 만들고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부를 상대로 반자본 정치투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쟁이 승리해야 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희망버스에 대한 무더기 소환·탄압 중단하라!

정부가 희망버스에 무자비한 탄압 세례를 퍼부으며 지금까지 무려 3백56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 대상자는 지금도 늘고 있고, “주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는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이것도 모자라 “5차 희망버스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밝히며 물대포 사용과 현장 체포 등을 공언했다.

그러나 권력형 측근비리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이명박 정부가 “법 질서” 운운하는 것은 정말이지 꼰대본능이다. 더구나 경찰이 말하는 “법 질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희망버스 참가자는 마구잡이 소환하고 한진 사태의 근원인 조남호는 소환하지 않는” 경찰의 이중성을 꼬집어 비판했다.

따라서 희망버스 기획단이 이런 경찰

탄압을 규탄하며, 소환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한 것은 매우 올바르다. 기획단은 벌금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공동 대응기로 했다. 이것은 탄압의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기와 투지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이 적극 나서 이들을 방어해야 한다.

박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17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세종호텔

구조조정·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다

세종호텔 사측이 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 이동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타 부서 전보·인력 감축·노동강도 강화가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고, 올해 임금 교섭도 회피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현재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장차 세종호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사측 관리자는 부서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적 수익 확보를 위해 당분간 긴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긴축”은 바로 피땀 흘려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것이다.

사측이 민주노조인 세종호텔노조 무력화에 안달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친사측 우파노조 결성을 지원했고, 민주노조 탄압도 시작했다. 최근 인사 이동에선 노조 부위원장 등 조합원 네 명을 부당 전보했다. 자신의 계획에 반기를 들어 온 눈엣가시를 뽑아내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2년간 “회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익이 늘었다”고 자랑하지만, 매출 증가의 열매는 우리 노동자들



노동조합의 출근 홍보전

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악랄한 사측은 오히려 우리를 더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다.

게다가 현 경영진은 재단 비리로 쫓겨난 전력을 가진 부패 대명사이기도 하다. 호텔 주식을 1백퍼센트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 재단은 독재 정부 시절부터 정권과 유착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고, 1990년엔 전 이사장 주명건의 장인이었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투쟁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그래서 세종대 학생들은 “세종

대의 불행한 역사의 한가운데 주명건이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주명건은 2004년에 공금 유용으로 이사장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그가 2년 전 세종호텔 회장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했지만, 비리 재단 복귀를 지원한 교과부조차 아직까지 그를 재단 정이사로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악랄한 사측에 당당히 맞서기로 했다.

노조는 9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의대체위 전환과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부당 전보를 당한 조합원들이 투지를 불태웠다. 조주보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측이 싸움을 걸어 온 이상, 맞서 싸우겠다. 이번에는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는 단결 투쟁을 호소하며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을 결집시키려 애쓰고 있다. 그리고 비리 재단에 맞서고 있는 세종대 학생 등과 민주노총·지역 단체들과의 연대도 확대할 것이다. 많은 동지들이 우리 투쟁에 지지를 보내 달라.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전교조 전북지부처럼 싸워야 한다

2학기가 되면서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교원평가제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것은 교원평가제 거부 움직임을 잠재우려는 포석이다.

우파들은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반대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 사이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 교육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교사 간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을 힘들게 할 것이다. 또 획일적 평가 기준을 부여해 정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강한 압력을 주고,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교원의 전문성과 공교육의 신뢰를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갇아먹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전교조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평가제 찬반 설문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무려 79.7퍼센트나 됐다. 교원평가제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71.9퍼센트였다.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협력 문화를 저하한다’,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다’는 의견도 절반

을 크게 웃돌았다.

그런 점에서 진보교육감들조차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수용한 것은 유감이다. 전교조 지도부도 이런 상황에 안일하게 대응한 듯하다. 지도부는 동료 평가 거부를 지침으로 냈지만, 이를 진지하게 조직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올해 초 전교조 전북지부의 투쟁은 매우 인상적이다.

지난 4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밀려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려 하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청 점권실을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다. 교사들의 지지가 이어져, 집회와 농성에 수백여 명이 참가했다. 결국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에 맞서 “자체 시행안을 관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 방침을 거부하고 서술형 평가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투쟁은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교조 지도부는 바로 이런 투쟁을 더 광범하게 확대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사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결집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에게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라는 압력을 넣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10월 17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권영길·김영훈의 민주노동당 당대회 발언을 옹호하며

최근 민주노동당 계시판과 〈민중의 소리〉등 일각에서 ‘참여당과의 선통합’에 반대한 민주노동 김영훈 위원장과 권영길 의원에 대한 비난과 막말이 쏟아지고 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도 일부 대의원들은 김영훈 위원장과 권영길 의원이 연설하는 도중에 “격조”없이 막말을 했다.

특히 권 의원이 민주노동의 산별·연맹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자, 곧바로 여러 대의원들이 야유와 고함을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건설연맹이 호명됐을 땐 한 대의원이 “건설연맹은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권 의원의 연설은 ‘여러 노동



9·25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 부결을 호소하는 권영길 의원

에 속한 간부·활동가·조합원 등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

로, 참여당 문제로 민주노동이 분열할 판이라는 맥락이었다. 건설연맹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결정했다고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권 의원의 발언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무리수

실제로 나는 건설노동 내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간부·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김금철 건설노동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장·지부장 등 여러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이 서명에 동참했다. 건설노동 내에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노동자 선언에 건설노동 간부·조합원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

런데 이 명단에는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은, 심지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쪽이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세를 과시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다.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이 부결된 이후 진보대통합의 가능성은 커졌다. 진보진영, 민주노동의 분열을 막은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정은 올바른 것이다. 더구나 참여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이지 진보가 아니지 않나.

더는 권 의원과 김 위원장에 대한 비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대회 결정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박재순 건설노동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장

카이스트 교수들의 서남표 총장 퇴진 요구를 지지한다

지난 9월 29일 카이스트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총장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수협의 서남표 총장 퇴진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경쟁 격화로 괴로워하던 학생들의 죽음의 행렬이 있는 후, 서남표 총장은 혁신비상위원회(이하 혁신위) 의결 사항을 모두 시행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그마치 4개월이 지난 지금, 서남표 총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그의 태도는 조금이나마 남아 있던 학우들의 신뢰와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지난 6월, 서총장은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며 혁신위 의결사항 시행을 미뤘다. 이후 의결사항 이행 과정에서 등록금심사위원회에 학생 참여, 영어 강의 최소이수요건 적용 등 주요 안건들을 본부

임의로 수정·해석하는 등 뻔뻔함을 계속해서 보였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대학평의회 발족과 이사회 구조 개편)은 이사회에서 아예 “보류”됐다.

서 총장은 약속 이행 거부, 소통 문제 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 손실 책임, 학교 자금과 인력으로 개발한 온라인전자동차, ‘모바일 하버’ 같은 기술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 논란 등 각종 도의적인 문제에도 휩싸였다. 그가 한 학교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심히

당황스럽다. 서남표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말한 문제들로 미루어 우리도 더는 학교본부와 서 총장의 태도가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9월 30일 발표한 총학생회 입장은 교수협의 퇴진 결정을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았다. 총학생회가 서남표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하며, 교수협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고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홍 카이스트 학생

부산지역 9·29 집회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9월 29일 부산대학교 앞에서 대학생과 한진중공업 노동자 3백50명이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구조조정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부실 사립대와 부실 국립대로 지정된 학교 학생들과 통합에 반대하는 부산대·부경대 학생들도 참가했다. 부산대가 통폐합 반대 총회를 성사시켰던 터라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교대 윤두영 총학생회장은 “정부는 부산교대의 교사 임용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부산교대를 부실 국립대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금 교사가 더 필요한데도 교사를 뽑지 않고, 비정규직 교사 등을 양산하고 있다. 그래서 임용률이 낮은 것이다.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고 규탄했다.

또, “정부는 부산교대에게 공공립대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총장직선제 폐지를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정말로 폐지돼야 할 것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교과부”라고 주장했다.

경성대 장미란 철학과 학생회장은 “경성대가 부실 사립대로 지정됐는데 총학생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부실 사립대 지정에 반대하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책임 전가

민주노동 윤택근 부산지역본부장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도 연대 발언을 했다. 한진 노동자는 “나는 한진 투쟁 때는 항상 내부세력이었는데, 처음 외부세력이 돼 본다. 하지만 등록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다. 10월 8일 5차 희망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외부세력이 돼 달라”고 호소

했고 많은 학생들이 환호했다.

〈시사IN〉고재열 기자도 연설을 했다. 고 기자는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고, 한진중공업 문제와도 연결시키면서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옳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고 기자는 부실 사립대 선정을 지지하면서 엉뚱하게도 이것이 ‘학생들이 싸워 얻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입해 재단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부실’ 사립대 선정을 지지할 수는 없다.

정부는 사립재단 전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주요 사립대 재단은 여전히 엄청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 사립대 선정의 피해는 재단이 입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돌

아온다. 이미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고, 졸업 이후 취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은 지금 정부의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지지하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일관되게 맞설 수 없다.

고재열 기자는 “대학생을 위한 정책은 비대학생에게, 장애인 정책은 비장애인에게, 노인 정책은 청년들에게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과 교육 공공성은 노동자들의 학비 부담 문제고, 장애인 복지 확대는 비장애인의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되며, 노인 복지는 청년들의 노후대책이자 노동자들의 노인 부양 비용을 줄이는 것이어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박준희 부산대학교 학생

‘공산당도 보장해야 민주주의’라는 박원순의 말은 옳다

박원순 변호사가 “공산당의 활동도 보장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한 것을 두고 보수 측이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자처하는 보수 측이 박원순을 비난하는 데서 몇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면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척과 배제의 논리, 자유 아니면 공산주의라는 반공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로 무장한 자칭 ‘보수’들이 과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일까?

둘째, 〈뉴데일리〉는 ‘공산주의 = 북한’이라는 등치관계를 설정해 놓고 ‘자유민주주의의 싫으면 북한에 가 살라!’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박원순의 발언을 곧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몰고 가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동적’ 인물로 낙인찍어 버렸다. 이것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빙자한 반공 기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공산주의는 국가의 소멸을 추구하며, 계급혁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사회라고 나온다. 또한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 즉 자유로운 노동을 지향한다고 나온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의 주요 이념과 사상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 원래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첫째, 아래로부터 계급 혁명이 발생한 적이 없고, 둘째, 부자 세습을 통해서 독재 체제의 영구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영속화를 추구하며, 셋째, 그 어떠한 형태의 자유, 심지어 노동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공산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북한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이어야 하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을 발미로 공산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참칭한 다수의 횡포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상의 은사’로 불린 리영희 선생은 ‘숨배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로막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성과 신성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설사 자유민주주의가 ‘참’이라 할지라도 대안적 견해로서 공산주의 등 다른 사상을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태준 고등학생 독자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정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토론회
미국 월가 점거, 그리스 노동자 투쟁 ...
경제 위기에 맞선
전세계적 반란은 시작되는가?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10월 2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토론회
미국과 유럽의 저항 —
제2의 68 '혁명'은 도래하는가?
연사: 섬외 중
일시: 10월 2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섬외 중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위기, 저항, 그리고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편집자
일시: 10월 2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화회역 4번 출구 도보 3분,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2-6338-2395

대학생다함께 마르크스주의 포럼

서울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왜 미국의 젊은이들은 월가를 점거했는가? —
세계적 경제 위기와 그에 맞선 저항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경제 전문 기자
일시: 10월 11일 (화) 오후 7시
장소: 국민대학교 공학관 별관 B201호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678-8630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이집트 혁명

안 알렉산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이자 중동 전문가

버스들이 바리케이트처럼 영국 정부 청사 주변을 빙돌렸고 버스 노동자 1천 명이 총리 관저 앞에서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대중 교통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지난주 이집트에서는 대중교통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실제로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

버스 노동자들은 대중교통부가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최소한 2백퍼센트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버스 노동자들의 월급은 너무나 적다.

대중교통부 노동자들은 또한 대중교통 투자 증가와 무바라크 정부에서 임명된 부패한 관리들의 해임을 요구한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 아흐마드 알보라이는 노동자 대표 중 하나인 푸아드 살리흐가 현 정부 정책이 무바라크 시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자 여러 번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경비

한 번은 살리흐가 다음과 같이 장관한테 말했다. “우리는 30년 동안 무바라크 체제를 견뎌소. 그리고 그들은 도둑떼에 지나지 않았소. 그런데 장관 나라, 우리 더러 다시 한 번 참으라갑쇼!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려.”

알보라이는 경비를 불러 살리흐를 협

상장에서 내쫓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돌을 말리면서 사태를 진정시키자 이번에는 알보라이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9월 27일 발표된 협상안의 내용을 보면 공공운수청과 재무부는 임금·수당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합의된 일정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협상단이 집회로 복귀하자 파업 노동자 다수가 협상안에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버스 노동자 파업 연대에서 핵심적 구

실을 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9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되기도 전에 파업을 멈추라고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파업 노동자들이 이미 1차 승리했다. 노동자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을 위협했던 관료들이 이제는 직접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10월 1일 이집트 정부 장관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노동자들은 대중교통부가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키려 함을 발견했다.

노동자 수천 명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타흐리르 광장 근처의 카스르 알아이니 가(街)에 모였다.

군부

교통 운수 노동자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자들 중 하나다. 이집트처럼 중앙집중화된 나라에서 교통 운수 노동자 파업은 순식간에 엄청난 파장을 낳는다.

교통 운수 부문 내 노동자들의 연대 행동은 이집트 독립 노조 운동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집트 집권 군사평의회는 버스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 농성과 함께 또 다른 기층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9월 30일 이집트 전역에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긴급법과 군부 탄압에 반대하는 행동에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

수만 명이 ‘혁명의 부활’을 요구하며 집회중인 타흐리르 광장에 노동자 참가단도 함께 했다. 그들은 “빵, 자유와 사회정의”, “군부 독재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는 파업

카이로에서 필 마플릿 영국 사회주의자 중동 전문가

파업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집트 혁명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업을 벌이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올해 수업은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집트의 학교 약 4만 6천 개에 1백 50만 명이 고용돼 있다. 9월 17일 나일강 삼각주의 도시 전역에서 온 교사 수만 명이 카이로의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이 분노한 이유는 교육부 장관과 정부가 교사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번번이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교사들이 임금

이 너무 낮아서 부업으로 서빙을 하거나 택시 운전을 한다.

오전부터 도착한 교사 대표들은 카이로 중심부 행진을 거쳐 시위에 합류했다. 이집트 북부의 모든 주요 도시에서 대표들이 파견됐다.

교사들은 10시간 동안 타흐리르 광장 인근 카스르 엘에이니 거리의 정부 청사를 에워쌌다. 이들은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낮 동안 시내 대부분을 봉쇄했다. 시위대는 무바라크 정권에 맞서 타흐리르 광장에서 외쳤던 구호들을 다시 외쳤다. “교사들은 교육부 장관 해임을 요구한다. 장관을 해고하라!”

정부 관리의 대표 5명을 뽑으면 장관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노라고 제

안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거부하고 “장관이 이 자리로 와 우리 모두 앞에서 약속을 하라” 하고 외쳤다.

80퍼센트에 가까운 교사들이 파업 중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교사가 파업에 참가했다.

‘독립교원조합’의 칼리드 느아마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동안 모든 법적 수단을 써서 우리 권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다 허사였다. 우리는 절망적이다.”

교사처럼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무바라크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파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가 부문 노동자 중 일부가 독립적인 노동조합들을 세웠다.

정부 관리들과 이집트 언론들은 무바라크가 제거됐으니 혁명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질서’가 회복돼야 선거를 치르고 새로 선출된 정부가 민중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많은 민중은 거짓말도 약속 파기도 더는 참기 힘들다. 새로 얻은 자유 덕분에 민중은 집단적 행동에 나서고, 중요한 요구들이 관철된 경우는 흔히 이런 행동 덕분이었다.

이집트 정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비상사태법’을 적용하겠다고 위협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그런 위협을 물리칠 힘이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천형석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무상복지 확대 요구도 가로막히게 된다.

한미FTA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 부문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들의 용어법을 빌리자면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은 신세계푸드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무상의료는 삼성생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식이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아예 한국 정부의 “정책 권한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한EU FTA다. 대형마트의 골목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당시, 이 법이 한EU FTA 위반이라는 정부 관료의 말 한마디에 국회의 논의 자체가 중단된 바 있다.

그래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사회를 더 재벌 중심적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만드는 민주주의와 복지 증진을 방해하는 협정”이라며 즉각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런 투쟁을 건설하고 지도해야 할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내 일부 지도자들이 한미FTA 반대 운동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등 김을 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위에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했을 때,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당론인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아당”의 입장이라며 “10+2 재협상안”을 요구했다.

재협상안은 민주당의 대안인데, 사실상 한미FTA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원천 반대하던 한미FTA를 요구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요구로는 제대로 된 투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난 9월 1일 민주당이 ‘미국에서 의회 상정이 확실시되면 한국 국회에 상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넘죽 받았을 때도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은 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지금 그 말

대로 된 것이다.

민주당이 결국 진보진영의 뒤통수만 치고 한미FTA 비준을 묵인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한EU FTA 당시에도 지금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미FTA를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가.

따라서 진보정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한미FTA 폐기 입장에서 절대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무상복지를 말하면서 한미FTA에 타협하려는 민주당을 폭로·비판하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한미FTA 비준에 반대한다면 단지 시늉과 생색이 아니라 몸으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막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장호중